1월 출생 · 혼인 역대 최저 "인구감소시점 빨라질 듯"

통계청, 2019년 1월 인구동향 발표

출생아 38개월째 전년比 감소…혼인건수 두 자릿수↓

기저효과로 사망자 13.6%↓…3년 만에 증가세 꺾여

올해 첫 달에도 출생 및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건수가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으며 출생아 수는 38개월째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전국 시·구청 및 읍·면·동에 신고된 자료 기준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3만300명으로 1년 전(3만2300명)보다 2000명(-6.2%) 감소했다. 1월 기준 출생아 수는 지난 2016년 전년 대비 6.0% 감소한 이후부터 4년 연속 감소해 올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작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2017년(-11.6%), 2018년(-7.3%)보다는 감소폭이 다소 축소됐다.

1년 전과 비교한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 2015년 11월 3.4% 증가한 후 38개월 연속 감소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출생 건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혼인 건수는 2만1300건으로 1년 전(2만4400건)보다 3100건(-12.7%) 줄었다. 이 역시 1월 기준 역대 최저치이며 2016년 1월(-15.9%)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 폭을 보였다.

김 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지난 2017년에는 혼인과 출산의 주된 연령층인 30~40대 인구가 1983년생을 중심으로 급감하면서 출생아 수 감소 폭이 1년 내내 10%대를 유지했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도 예년에 비해 감소 폭은 다소 축소됐지만, 경제 어려움과 청년 고용 부진 등으로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80년대 정부가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당시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던 것이 현재의 초저출산 상황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시 정부 정책 영향에 출생아 수는 10년 만에 10만명이 감소했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2만7300명으로 1년 전(3만1600명)보다 4300명(-13.6%) 감소했다. 지난해 1월 한파로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22.0% 급증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통계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2017년(4.8%)부터 2년째 늘어나던 1월 기준 사망자 수는 올해로 3년 만에 그 기세가 꺾였다. 지난해 11월(-0.8%)과 12월(-1.4%)보다 감소 폭도 더욱 확대돼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절대적인 규모 자체는 지난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어서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수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혼 건수는 9700건으로 전년(8900건)보다 800건(9.0%) 증가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으며 2008년 1월(1만645명)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년 이상 함께 살다 갈라선 '황혼이혼'이 최근 급증한 데 따른 영향이다.

한편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 인구상황에 대해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30~40대 인구 감소 폭이 커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작년 합계출산율과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오는 28일 발표될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 상 인구 감소 시점이 지난 2016년 기준 예측치인 2031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2금융권으로 뻗는 DSR규제…서민대출 막힐라 우려

"6등급 이하 차주들 대부업으로 내몰릴수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올해부터 2금융권에도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여신전문금융, 보험 등에도 DSR이 관리지표로 도입된다.

DSR이란 대출한도를 측정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차주에 대한 대출을 억제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지표다.

은행권은 이미 지난해 10월 관리지표로 도입했고 2금융권도 시범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전날 '2019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올해 중 DSR을 2금융권 관리지표로 도입하겠다고 재차 안내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달초 올해 금융위 업무계획을 소개하면서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인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해 하향안정화 추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2금융권까지 DSR을 도입하면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가계부채 증가세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 중 도입하기로 했고, 자세한 도입 일정은 아직 협의 중이다"고 전했다.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과 2금융권 전체에 일괄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2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일을 마냥 반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금융권의 주요 고객은 비교적 저신용자들이다. 저신용자일수록 부채가 많을 가능성이 높은데, DSR을 관리지표로 활용하면 이들에 대한 대출문턱이 집중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심사가 깐깐해지면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저축은행을 주로 이용하는 6등급 이하 차주들이 2금융권 밖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금융권역을 은행과 2금융, 대부업으로 나눠 놓은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리스크에 따라 다음 권역으로 넘기는 것"이라며 "거래 고객이 다른 은행이나 저축은행이나 규제를 똑같이 적용하면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 수요가 있는 이들이 높아진 문턱을 견딜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축은행에서 7%에 쓸 돈을 대부업체로 가서 20%에 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출수요가 높을 수록 저신용자일 수록 높아진 대출문턱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DSR지표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자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소득이 적으면 2금융권 대출길이 막혀 대부업으로 밀려날 수 있어서다.

조 원장은 "차주가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멀쩡한 담보물이 있음에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결국 돈이 필요한 사람은 대부업체에서 비싼 대출을 받아야한다"고 분석했다.

목포 수산가공식품 '구을비' 공영홈쇼핑 진출

4월12일 첫 방송…저온진공 건조공법으로 비린내 제거 · 염도 낮춰 대박 예감

목포시는 출연기관인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수산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수년간 연구개발한 수산가공식품이 공영홈쇼핑에 진출한다고 27일 밝혔다.

판매 상품은 목포 연안해역에서 나는 굴비로 만든 '구을비'이다.

'구을비'는 현대식 저온진공 건조공법으로 말려 비린내를 제거하고 염도는 낮추면서 신선도는 크게 높인 제품으로 위생적이고 먹기 편하게 가공됐다.

전자레인지에 1분만 데우면 바로 먹을 수 있는 편리함은 물론 1마리씩 개별 포장으로 보관이 용이하다.

'구을비'는 오는 4월12일 첫 판매 방송을 시작으로 '공영홈쇼핑' 채널을 통해 5월과 6월 한 차례씩 전국 소비자를 찾아갈 예정이다.

제조와 판매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입주기업인 D수산에서 맡아 진행한다.

이 업체는 최근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원물 생선보다는 간편 가공식을 선호하는 추세에 맞춰 개발된 '구을비'가 현대인의 소비트랜드에 적합한 제품으로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생선 특유 비린내와 손질의 불편 때문에 수산물을 기피하는 젊은층도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목포시는 '구을비'의 홈쇼핑 진출을 계기로 고부가가치 수산가공식품의 브랜드화와 전국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오병준 센터장은 "목포는 서남해안 자원의 집적 및 유통의 중심지이다"면서 "수산물과 염건품의 전국 최대 생산지인 지역특성을 활용해 목포를 전국에서 제일가는 맛의 도시로 성장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aT, 해외진출 돕는 법률정보 조사집 발간

한류 인기에 힘입어 해외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외식업체를 위한 현지 법률정보 조사집이 나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외식기업이 해외 진출시 준비해야 될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제도·국가별 진출전략'을 정리한 '해외 주요국 프랜차이즈 법률정보 조사' 책자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집은 한류 열기로 시장성이 높아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등 4개 국가별로 제작됐다.

책자에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합작투자, 직접진출, 진출유형별 전략'을 비롯해 '부동산, 상표·특허, 기업설립·인허가 제도', '인사·노무·세금 관련 규정' 등 현지 진출을 위해 꼭 필요한 관련 법률과 제도가 정리돼 있다.

이 밖에도 해외 진출의 길잡이 역할을 해 줄 인도네시아의 할랄 제도와 현지 시장 특수성, 문화적 측면을 비롯해 국가별 프랜차이즈 진출 성공사례도 함께 담았다.

aT는 올해 안에 추가로 4개 국가의 조사집을 발간할 예정이다.